

이슬람국 인질 사태와 일본외교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I. 이슬람국에 의한 일본인질 사태
- II. 아베 중동방문의 역효과'
- III. 집단적 자위권 강화에 나선 아베정권
- IV. 테러 리스크와 일본내 논란

I. 이슬람국에 의한 일본인질 사태

일본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이슬람국에 납치된 2명의 일본인 인질이 지난 2월1일 참수된 것이다. 이슬람국은 악몽이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슬람 통치지역에서 활동하는 일본인은 40명이 넘는다. 2003년 이라크에서 일본 외교관 2명이 테러를 당해 피살되고, 2013년 알제리 천연가스 시설에서 일하던 일본인 기술자 10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작년 10월 홋카이도대 대학생이 이슬람국에 잠입하려다가 발각되었다. 일본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쏠렸다. 참수사태 후에도 취재차 시리아에 들어가려는 프리랜서의 여권을 일본정부가 강제로 압수했을 정도이다. 전례 없는 일이다. 일본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도쿄의 서점에는 이슬람국과 중동분쟁을 다룬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작년6월 이슬람국은 이라크북부 제2의 도시 모술을 점령하고 국가창설을 선포하였다.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에 걸친 영국 크기만한 영토이다. 통치지역내 거주인구도 무려 8백만명에 달한다. 기존국경은 어차피 서구 제국주의가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것이니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1,100만이 넘는 난민 발생, 이라크 말리키 정권의 시아파 우대정책과 종교 갈등,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에서 국가기능 파탄과 힘의 공백이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내고 있다.

중동지역의 청년층 증가와 실업난에다, 유럽내 차별과 빈곤으로 희망 없는 아랍계 젊은이들을 이슬람국이 끌어들이고 있다. 석유밀매와 납치극, 세금징수로 하루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다. 도로와 하수도를 정비하면서 주민

들 지지도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격차사회와 중동의 혼란이 이슬람국의 극악무도한 납치살해와 충격적인 동영상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미국 중동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슬람국의 충격이 심각한 위협으로 장기화될 전망이다.

작년 8월 사설 무기업체를 운영하던 유카와 하루나가 사업차 시리아를 방문한 뒤 이슬람국에 납치되었다. 현지에서 활동중인 고토 켄지가 유카와 하루나를 만나고 시리아에 들어갔다. 그는 10월25일 시리아인 가이드에게 비디오 메시지를 남기고 행방불명으로 사라졌다. 급기야 12월에는 고토 켄지 부인에게 2억 달러를 요구하는 이메일이 날라들었다. 일본외무성은 총 비상이 걸렸다. 요르단 암만의 일본 대사관에 설치된 현지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섭을 시도하였다. 이슬람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집트, 터키 등의 현지 부족장, 종교단체 대표들에게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직접적인 접촉은 불가능했고, 이메일로만 연락할 수 있었다. 전문가 부족으로 현지정보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했다. 시리아에 있는 인질을 구출하는데 요르단에 대책본부를 설치한 것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올해 1월7일 프랑스에서 연속 총격테러 사건이 일어났고 이슬람국은 서방국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였다. 1월20일 이슬람국은 고토 켄지와 유카와 하루나 2명을 살해하겠다는 동영상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아베수상은 국회답변에서 이슬람국 테러집단과의 협상은 없다고 선언하였다. 이슬람국은 2억달러 대신 요르단에 수감된 여성 테러리스트 사지다 알 리샤위 석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아베수상은 미국과 요르단에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인질범 석방교섭에 소극적이었다. 급기야 2월1일 이슬람국은 고토 켄지가 참수된 동영상을 공개하였다.

II. 아베 중동방문의 역효과

과연 일본정부의 대응은 적절했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왜 아베수상은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중동을 방문했을까. 일본외무성은 아베의 중동방문을 반대했다고 전해진다. 그럼에도 아베수상은 1월16일부터 20일까지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방문하였다. 단지 인질범 석방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분쟁지역을 방문하여 일본의 국제공헌을 강조한 것이었다.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던 아베수상이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찾기도 하였다. 요컨대, 글로벌 외교와 적극적 평화주의를 합친 아베류 외교전략의 일환이었다.

2015년1월17일 아베수상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일본과 중동 관계를 중시하면서

인도적 지원과 인프라정비 등에 25억 달러를 지원할 의향을 표명하였다. 중동지역 안정화를 위하여 일본이 글로벌 파트너로서 공헌해가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국제 협력에 기초한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토대로 경험, 지혜, 능력을 살려서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각오를 호소하였다.

문제는 일본인 인질 2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태에서 중동지역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내용도 이슬람국을 자칫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슬람국과 싸우는” 주변국에 대하여 비군사 분야에서 2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군사 지원은 난민을 위한 식량과 의료지원 등이다. 테러와의 전쟁, 인도적 지원은 일본정부의 기본입장이며, 별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그러나 두명의 인질이 사로잡힌 상태이다. 이스라엘 국기앞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적절하지 못했다. 아베수상은 이스라엘을 방문중인 미국 공화당 맥케인 상원의원을 포함한 7명의 미국의원과 만나고 있다.

비군사 분야 인도적 지원도 이슬람국은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 난민지원은 시리아나 이라크 모국으로 난민들의 귀국을 지원한다. 새로 국경을 확대시키고 지배지역 주민 숫자를 늘리려는 이슬람국에게 위협으로 인식된다. 아베수상의 중동방문이 끝나자마자, 인질범을 살해하겠다는 동영상이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결국 2명의 일본인 인질이 참수되는 비극으로 끝났다.

야당으로부터 무분별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예민한 시기에 중동지역을 방문하여 불필요하게 이슬람국의 반발을 샀다는 것이다. 프랑스나 스페인에서는 석방금을 지불하고 인질이 풀려난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미일동맹과 테러와의 전쟁에 집착하는 일본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고토 켄지 피살후 아베수상은 잔학무도한 테러리스트 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국제사회와 연계하면서 대응하겠다, 일본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Ⅲ. 집단적 자위권 강화에 나선 아베정권

아베수상은 2월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인도적 지원을 통해 테러리즘에 맞서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일본NGO는 분쟁지역과 세계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만큼 테러와 납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아베수상은 자위대가 납치된 자국민 구출에 무기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인질 납치사태를 배경으로 아베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을 강화하고 본격적으로 자위대 군사활동을 확대해 갈 전망이다.

일본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없어도 전투중인 타국군대를 자위대가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 결의에 따라 활동하는 다국적군뿐 아니라, 유엔 결의 없이 테러와의 전쟁에 나선 미군의 단독 군사행동까지 자위대가 후방 지원할 수 있다. 유사시 미군 후방지원을 규정한 주변사태법도 바뀔 수 있다. 주변개념을 확대하여 사실상의 지리적 제약을 없애기로 했다. 세계 어디에서나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시킬 수 있는 요건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자위대가 분쟁지역 미군지원은 물론, 준 동맹국에 해당하는 호주군대도 지원할 수 있다.

더구나 항구법까지 검토하고 있다. 항구법이 제정되면 자위대 파견 여부를 국회에서 그때그때 논의할 필요 없이 일본정부 판단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보낼 수 있게 된다. 따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거나, 자위대 파견기간을 제한할 필요도 없다. 아베의 생각은 미일동맹을 보다 확실한 글로벌 군사동맹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공명당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지만, 정치역학상 결국 자민당 제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불과 1년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일본판 NSC를 만들었던 아베정권이다. 이번 사태 이후, 일본정부는 미국의 CIA, 한국의 국가정보원, 영국 MI6을 모델로 새로 정보기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전후 외무성 출신이었던 요시다 수상은 모든 해외정보를 외무성 채널로 단일화시켰다. 예컨대, 해외대사관에 파견된 일본경찰도 수집된 정보를 반드시 외무성에 보고해야 한다. 외무성은 정보만 다루는 전문기관이 아니다. 인질 참수사태에서 일본의 정보능력상 한계도 드러났다. 대테러 사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면 지금 내각조사실 수준으로 부족하며, 국가정보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IV. 테러 리스크와 일본내 논란

일본인 인질 참수사태이후 아베정권의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자위대의 해외활동과 군사개입 확대노선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미일동맹의 글로벌화를 뜻한다. 일본 자위대가 해외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많은 일본인들이 분쟁지역에서 NGO단체 대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일본인 해외여행객 숫자는 매년 1,700만명에 이를 정도이다. 분쟁지역 취재에 몸을 사리지 않는 프리랜서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국제테러와 납치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기를 사용하여 일본인 구출임무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엄청난 군사, 정보대국인 미국조차 시리아 인질구출 작전에서 실패한 것을 보아도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일본야당은 아베정권이 인질 참수사태를 계기로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여,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단숨에 확대하는 법제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 아래서, 미일동맹의 글로벌화, 자위대 해외활동이 늘면 늘수록 일본인들의 인질 사태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지역분쟁 틈바구니에서 일본정부와 일본국민은 더욱 더 위험에 노출된다. 그러나 아베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 미일방위협력 지침, 가이드라인이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글로벌 미일 안보협력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개발원조인 ODA 기본방침을 바꾸어 간접적인 군사지원도 가능하게끔 검토하고 있다. 이슬람국 인질사태 이후 아베정권은 보통 국가 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헌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자주 드러내고 있다. 이슬람국 일본인 인질사태가 동북아 국제정세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2015/02/23)

※ 코리아연구원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의 회원 등록을 권합니다.